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28일 미니 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해 광주시 동구 광산동 옛 전남경찰청 본관내부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있다. 이 건물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민주평화교류원을 구성하는 6개 공간 가운데 하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평동 軍 포사격장 장성 이전 '급물살'

국방부 훈령 '단체장 동의' 삭제
74만평...자동차 벨리 조성될 듯

광주 도심 내 마지막 남은 '대형 급물살'로 불리는 광산구 평동 군(軍)포사격장이 국방부의 훈령 개정으로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1951년부터 포사격장으로 사용된 지 64년 만이다. 면적만 246만3000㎡(74만5000평)에 이른다.

평동 포사격장 부지는 호남선 KTX 거점역인 송정역 뒤편에 위치한데다 광주~무안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는 등 접근성이 뛰어나 광주의 미래가 걸린 '자동차산업 벨리' 관련 산업단지 등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2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31일 '국방군사 시설 이전사업' 훈령을 일부 개정했다. 기존 군 시설 이전 시 이전 대상 지역 자치단체(정)와 이전 관련 MOU체결 또는 공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이전지역 주변 영향평가 용역을 거친 뒤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하도록 했다.

국방부가 자치단체(정)의 동의 조항을 삭제한 것은, 평동 포사격장처럼 자치단체의 반대로 이전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를 없애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실제 광주시는 지난 2011년 4월 육군보병학교와 광산구 평동 포사격장 이전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나 장성군의 반대로 4년여가 되도록 진척이 없다. 당시 보병학교 종합훈

평동 군 포사격장 위치도



련장 인근 부지를 매입해 포사격장 이전을 검토한 것이 발단이 됐다.

장성군은 "더 이상 군 시설을 확대할 수 없다"며 강력 거부했고, 이후에는 "보병학교 부지 내 이전은 반대하지 않겠다"며 한발 양보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육군 교육사령부는 지난 2013년 이전 가능 용역에 통해 '평동 포사격장의 장성보병학교 내 이전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어냈으며, 광주시는 재협상에 나섰지만 장성군이 "장성에 추가 군시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입장을 번복하는 바람에 협상은 또 결렬됐다.

광주시는 민선 6기들어 '인근 자치단체와의 상생'을 선언한 만큼 최대한 장성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 이전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훈령을 개정할 정도로 이전 방침이 확고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장성군과 만나 상생의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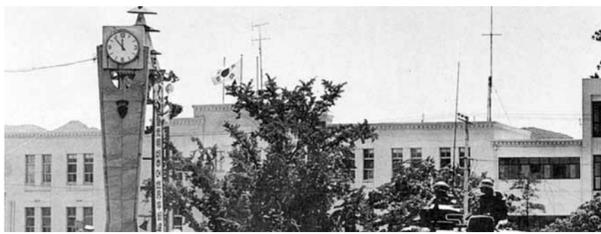
민주평화교류원 리모델링 시작... 옛 도청 본관 등 5·18 때와 같은 흰색으로 복원 문화전당에 '5월의 숨결' 불어넣는다

별관엔 '기억의 공간' 상징물
오월 배움센터·열린공간으로

무려 1년여 동안 공사가 중단돼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 완공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민주평화교류원 건물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시작됐다.

원형보존키로 했던 옛 전남도청 본관, 상무관 등 광주항쟁 건물들은 내부 공간 재배치 작업을 거쳐 80년 광주항쟁 때와 같은 흰색으로 복원된다. 노후한 탓에 당초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던 옛 도청별관 건물은 5·18 리넨센터와 시민 휴게공간으로 되살아난다.

28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문화전당 5개 원 가운데 하나인 민주평화교류원 소속 건물들을 개·보수하는 리모델링 공정에 착수했다. 사실상 문화전당 완공의 마지막 공정이 시작된 것이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흰색 외벽이었던 전남도청 본관 건물.

민주평화교류원은 그동안 설계변경, 콘텐츠 보강 등으로 1년여 동안 방치돼 문화전당 완공의 걸림돌이었다. 반면, 문화전당을 구성하는 나머지 4개 공간(아시아문화정보원·문화창조원·아시아예술극장·어린이 문화원)은 지난해 10월 말 완공됐다.

민주평화교류원은 광주항쟁을 예술로 승화한 작품을 선보이고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와 교류하는 공간으로, 옛 전남도청 본관과 별관, 회의실과 상무관, 경찰청 본관, 민원실 등 6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이들 공간은 민주평화교류원의 민주인권평화기념관, 아시아문화교류지원센터, 방문자 서비스 센터 등으로 재단장된다.

추진단은 오는 9월 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있어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현재

옛 전남도청본관 등 리모델링 대상 6개 건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주된 작업공정은 내부 벽체를 철거한 뒤 공간을 재배치, 전시장 등으로 변경하는 작업이다.

추진단은 이들 건물이 광주항쟁 유적임을 감안해 사실성과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80년 당시 모습대로 건물 외벽을 흰색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광주항쟁 희생자들의 추모공간으로 조성될 상무관은 원형훼손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건물에 손을 대지 않고 내부 공간을 재단장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에서 광주항쟁 희생자들의 유해를 안치했던 상무관의 지붕을 뚫어 추모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5·18 단체 등의 철거반대로 문화전당 완공시기를 2년여 늦추는 결과를 불렀던

도청별관의 일부 철거공간은 상징적인 구조물로 복원됐다. 이 공간은 1980년 5월27일 계엄군의 진압작전에 시민군 14명이 희생된 최후의 현장이다.

추진단은 길이 54m에 이르는 도청 별관 가운데 도청 본관과 맞닿은 24m 부분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강구조물(4층 높이)로 원래 건물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현재 남아있는 별관 건물은 골조 보강을 거쳐 5·18 리넨센터, 시민 휴게공간으로 재활용된다.

추진단은 민주평화교류원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는 대로 전시작품 설치 등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 구축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해당 콘텐츠는 황지우(한국 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밑그림을 그린 '열흘간의 나비떼'(가칭)로, 5·18 당시 열흘간의 이야기를 기·승·전·결 구조에 따라 극장식 감성체험이 가능하도록 22개의 전시로 구현된다.

한편, 민주평화교류원 리모델링 대상 공간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문화전당 개관까지 준공될 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문화전당 개관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민주평화교류원 공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신대학교
학부 편입 062)605-1114
신학과, 국제한국어교육학과, 음악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유아교육과
신학대학원 편입 062)605-1115
원서접수 1. 26(월) ~ 2. 2(월)

구의회 폐지? 구청장들 뿔났다

지방자치발전계획 2월 확정
시장·군수·구청장협 반발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대해 기초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종합계획은 20년간 대한민국을 지탱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며 "당사자인 시군구와 의진수

렴이나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더 발전시켜야지 폐지한다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오늘 지방자치발전위가 개최하는 종합계획 설명회도 요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 만큼 전면 거부한다"며 "이번 종합계획도 반드시 철회하고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도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지방자치발전계획을 전면 수정·철회를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역발전.

국민의 행복을 더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HOPE 프로젝트!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맞춤형 지원

Happiness
(주민행복제고)

Opportunity
(균등한 기회제공)

HOPE project

Partnership
(자율적 참여와 협업)

Everywhere
(어느 곳에서도 보장받는 삶의 질)

- ☑ 63개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 특화발전프로젝트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 ☑ 농촌오지마을, 달동네 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지역발전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Regional Development